

문 대통령 “개헌 발의권 행사”

UAE 현지서... 靑, 입장문 대독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관련 입장문을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저는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 발의를 마쳤으며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해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아양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 그 이유는 네 가지”라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과 국정의 근간을 건드리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며 “따라



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심의, 의결했다.

(관련기사 3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 개헌, 촛불광장 민심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 대통령 아닌 국민 위해 마련... 내 이익은 없어 개헌 완성 최종권리는 국민에게 있어” 관심 당부

서 전국 선거의 횡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라며,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자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이라며 “우리 국민의 정치 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

의 관리에 대한 생각도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기본권·국민주권·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며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 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개헌안 발의안에 대한 재가를 전자결재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진성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 전북 강타

도, 대기환경 기준 강화

일평균 50㎍/m3 → 35㎍/m3

연평균 25㎍/m3 → 15㎍/m3

예보 등급 농도 기준도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북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이 강화된다.

26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미세먼지(PM2.5) 대기환경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고, 미세먼지 예보 등급 농도 기준도 강화된다.

먼저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미국, 일본과 동일한 기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일평균 50㎍/m3에서 35㎍/m3로, 연평균은 25㎍/m3에서 15㎍/m3

로 변경된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도 모두 강화돼 나쁨 등급은 현행 51㎍/m3에서 36㎍/m3으로, 매우나쁨 등급은 101㎍/m3에서 76㎍/m3으로 변경 시행된다.

이처럼 미세먼지 예보 등급 농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도내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지난해 평균(26일)보다 94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급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돼 국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GM 협력업체 특별자금 지원

전북도, 27·29일 군산산단공단지 현장설명회

전북도는 27일, 29일 2일간 군산산단공단에서 군산조선소 및 한국GM 군산공장 관련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한국GM 협력업체 등 특별자금 지원 설명회’를 연다. (관련기사 16면)

설명회 주요내용은 GM·조선업 관련 협력업체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북도가 긴급 발표한 ‘군산지역 경제위기 극복 특별자금 지원 종합대책(3.05)’으로 마련된 자금지원 사항이 주된 내용이다.

자금지원 사항은 총 4개로 도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존대출 거치기간 1년간 연장, 특례보증 연계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업운영 필수경비 무이자 지원이다.

먼저, GM·조선업 협력업체 중 신용도가 양호한 업체는 일반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업체당 최대 3억원 한도로 2년거치 2년상환, 이차보전 2.5%를 지원한다.

또 신용도가 낮은 업체들을 위해 추가로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특례보증 200억원을 통해 업체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연계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GM 및 조선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2년거치 2년

상환, 이차보전 2%를 전북도에서 지원한다.

기업 존치를 위한 세금, 전기로 등 필수경비 지원은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지원하게 되며 2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지원한다.

특히, 전북도는 업체에서 요구해 온 보증한도(8억원)를 초과한 업체도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 26일부터 조속히 시행토록 했다.

이는 업체가 현 신용보증 기준상 8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여 특례보증 재원 45억원을 보증기관에 예비비로 출연하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했다.

또한 GM협력업체 중 기존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한 거치기간 1년 연장을 지원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군산지역에 닥친 경제위기의 충격 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자금 투입을 통해 우선적으로 협력업체 안정화 대책을 긴급히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협력업체들이 산업구조의 미래를 향한 체질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2면 - 전국체전 · 장애인체전 성공 위해 4면 - 김현철 도의원 측 보낸 메시지 조사 5면 - 3D프린팅 · 드론 엑스포 내달 개최 6면 - 한미 FTA 협상 타결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곳!
강수여행
밭길 닿는 곳마다 자연이 주는 넉넉함과 정겨운 미소, 푸근한 인정이 넘치는 장수로 오세요!

장수군 JANGSU COUNTY